

이달의 초점

이주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한국 복지국가의 반이민태도 현황과 함의점

|김경환|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 인식과 이민정책의 과제

|곽윤경|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복지국가의 반이민태도 현황과 함의점

Anti-Immigration Attitud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State

김경환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태도의 현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복지 제공이 시민의 권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원권의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종족적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복지 국수주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복지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특히 이민자의 고용 및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에 일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대별로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세대별 이민자 수용성 차이에 주목한 정책 설계, 근거 기반의 공적 담론 형성, 포용적 복지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 들어가며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에 이민자 인구가 급격

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정책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경환, 2021).¹⁾ 1991년 외국인산 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4년 고용

1) 일반적으로 이민자(immigrants)는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국가에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다만 각국의 법적·정책적 맥락에 따라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 '이민배경인구'(immigration-background population) 등 이민자의 정의와 범주는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Bolter, 2019). 이 글에서 '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단기 체류자(90일 미만)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시행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체류와 고용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저숙련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민의 증가는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변화와 함께 한국 사회에는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민자가 한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반면(양세호, 이지안, 2023. 5. 10.)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경쟁이나 복지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임지훈, 2022. 4. 26.). 특히 언론에서 이민자의 복지 혜택 이용 사례가 보도되거나 일부 정치인들이 관련 이슈를 제기하면서(서지윤, 2024. 9. 11.) 이민자와 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Kim & Kang(2025)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확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이민태도(anti-immigration attitudes)는 ‘한 사회 내에서 희소한 자원에 대한 집단 간 경쟁 인식이나 특정 이해관계 및 특권에 대한 위협을 상대로 한 방어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Cea D’Ancona, 2016: 569-570). 이는 ‘우리’(내집단)와 ‘그들’(외집단) 사이의 이분법적

경계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민자에 의한 경제적 위협(economic threat), 사회·문화적 위협(socio-cultural threat), 그리고 치안·안보 위협(security threat)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 Kang, 2025). 구체적으로, 경제적 위협은 이민자의 증가가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나 임금 하락, 복지 비용 증가 등과 같이 경제적·재정적 자원의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위협은 이민 수용국 사회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변화를 우려하는 태도와 관련되는데, 이는 이민자가 해당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치안 및 공공안전 측면에서의 위협은 이민자가 범죄율 증가나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종종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기도 한다.

복지태도와 이민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이민자의 증가가 복지국가의 사회적 연대와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Garand 외(2017)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복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를 ‘복지의 이민화(immigrationization of welfare)’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Senik 외(2009)의 연구는 유럽 전반에서 사회 내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자국민의 복지 지출 지지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관계를 연구한 Kim(2022)의 연구 역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복지정책 지지 사이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관계가 복지 자원의 한정성, 재분배 문제와 밀접히 연관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 내 이민자 인구의 증가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태도의 이론적·현상적 배경을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복지정책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복지국가의 포용성과 재분배 정당성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탐색한다.²⁾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복지국가 맥락에서 반이민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론적·현상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반이민태도 현황을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202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왜 복지국가 맥락에서 반이민태도가 중요한가?

가. 이론적 차원

복지국가는 한 사회 정회원으로서의 시민이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당 시민에게 사회권, 즉 사회적 위험(social contingencies/risks)에 대한 권리로서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ierson, 1998). Marshall(1992)의 시민권 이론에 따르면 사회권은 경제적 복지와 안보를 위한 권리로 정의되며, 복지국가는 이를 실현하는 제도로 작동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 구성원과 종족적·문화적으로 다른 이민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국가의 사회권을 누구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된다. 이는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성원권 경계를 결정짓는 문제인 동시에 복지국가의 핵심인 평등과 연대 원칙을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체계에서 성원권은 법적(공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즉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Brubaker(1990:

2) 이 글에서 '이민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실증분석에 사용된 각 조사 자료에서 이민자의 정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 이주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202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이민자' 및 '외국인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각 조사의 목적과 한국 사회의 이민자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이들을 모두 '이민자'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칭하되 필요시 세부 집단을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80)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성원권을 조직하고, 경험하는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시민권 개념은 국민성(nationhood) 개념, 즉 “한 국민국가에 속하기 위해 이것(국민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의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시민권은 하나의 주어진 공동체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지위로 정의되었으며(Marshall, 1992), 성원권은 하나의 주어진 국가의 시민권 지위를 통해 배타적으로 정의되어 왔다(Tilly, 1995). 이러한 점에서 특정 사회에서 누가 정당한 구성원 또는 정회원인가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구성원에 대한 권리(특히 사회권)의 포용과 배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Van Oorschot(2000)에 따르면 서구 복지국가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에게 복지 수혜 자격(deservingness)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통제 가능성(control) 차원에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자신의 책임인지, 필요성(need) 차원에서 개인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기여도(reciprocity) 차원에서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는 어떠한지, 정체성(identity) 차원에서 복지 혜택 수혜자가 ‘우리 집단’(in-group)에 속하는지, 그리고 태도(attitude) 차원에서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이민태도는 이민자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치안·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곧 그들의 복지 수혜 자격 전반(즉 통제 가능성, 필요성, 기여도, 정체성, 태도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이민자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나. 현상적 차원(1): 서구 복지국가 맥락

서구 복지국가는 이민 배경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 복지정책의 정당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극우 세력의 대중영합주의(populism)가 두드러지는 상황(예를 들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극우전선 후보 마린 르펜의 돌풍, 독일 극우정당(AfD)의 연방의회 진출 등)에서 이민 또는 이민자 관련 의제가 이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강명세, 2020). 이는 한편으로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민자 권리의 강화로 인한 선주민의 불만과 반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oning, 2019). 다시 말해 극우 대중영합주의 정당들은 이민자 혐오와 복지 자원 고갈을 연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왔다. 이는 잔여적 복지정책이나 배타적 이민정책의 정당화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Slaven et al., 2021). 이러한 경향은 유럽 각국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와 이민 정책이 분리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복지국가 맥락에서의 이민민 정서는 복지 혜택이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민자에 대한 복지 배제를 정당화한다. 이는 ‘복지 국수주의(welfare chauvinism)’라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Greve, 2019). 복지 국수주의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민자들이 국가의 관대한 복지 혜택을 위해 정착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수준을 낮추고,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리고 여타의 공공 서비스를 남용한다는 감각’이 서구사회의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그리고 이민제도의 다문화주의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eskens & Van Oorschot, 2012).

다. 현상적 차원(2): 한국 복지국가 맥락

한국 사회의 성원권은 전통적으로 강한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바탕으로 설정되며, 이에 따라 국적법상 속지주의(출생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한다. 비록 최근 인구통계학적 변화, 즉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저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은 많은 이민자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종족적·문화적 배경

이 다른 이민자를 ‘우리’(내집단)와 구분되는 ‘그들’(외집단)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해 다소간 배타적인 정서를 가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일부 이민자와 관련한 복지 혜택 논쟁은 종종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과 결합하여 이민자의 복지 수급을 정당하지 못한 특혜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서적 반발은 대중 여론과 공공 담론 속에서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규찬, 2020).

이러한 갈등이 극대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500여 명에 대한 ‘난민 추방’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여 명이 동의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사례는 한국 사회의 복지와 이민 이슈 모두에서 상당한 논란 및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예멘 난민이 ‘불법 취업 난민’ 또는 ‘가짜 난민’이라는 시각에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거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안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사회복지 혜택, 그리고 이들의 한국 사회로의 재사회화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김경환, 송형주, 2022).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닌 성원권 또는 정체성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3 한국 사회의 반이민태도 현황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반이민태도는 어떠한가? 여성가족부의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김이선 외, 2022)를 중심으로 한국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³⁾

가. 다문화 수용성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다문화수용성지수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다양성 차원의 ‘고정관념과 차별’ 항목과 관계성 차원의 ‘거부·회피 정서’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대비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고정관념과 차별적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관계성 차원에서 이민자와의 상호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맺음(예: 친구 관계 형성, 친목 활동 참여 등)에

[표 1] 다문화수용성지수: 2012, 2015, 2018, 2021

(단위: 점, 100점 만점)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다문화 수용성	51.17	53.95	52.81	52.27
하위 차원 및 구성 요소				
(1) 다양성	53.23	55.15	53.90	53.95
문화 개방성	48.08	49.36	49.34	48.04
국민 정체성	48.84	50.32	48.78	49.20
고정관념 및 차별	61.73	64.60	62.58	63.42
(2) 관계성	49.86	53.45	51.59	51.09
일방적 동화 기대	49.91	46.44	45.69	48.53
거부·회피 정서	55.17	66.01	64.46	63.86
상호교류 행동 의지	43.61	45.81	42.48	38.76
(3) 보편성	49.85	52.76	52.98	51.39
이중적 평가	46.96	48.88	48.25	48.89
세계시민행동 의지	53.00	56.98	58.13	54.11
사례 수(명)	2,500	4,000	4,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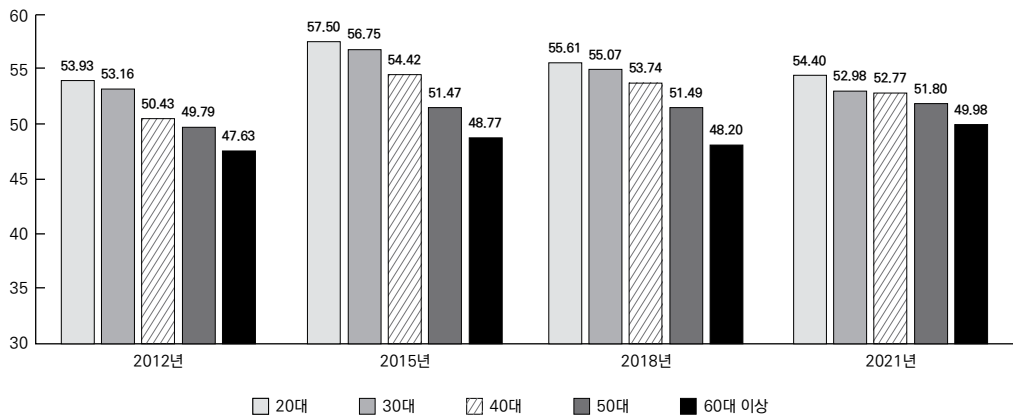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46.

3)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인데, 2021년 조사의 경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4) 여기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총 8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측정한다. 특히 (1) 다양성 차원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2)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3)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 등을 포함한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이선 외(2022: 19-23) 참조).

[그림 1]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2012, 2015, 2018, 2021

(단위: 점, 100점 만점)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52.

대한 의지를 측정하는 ‘상호교류 행동 의지’는 전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적 포용성에 비해 사회적·정서적 거리감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지수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조사 기간(2012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 또는 세대 간 수용성 격차는 반이민 정서가 주로 고령층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동인, 문상현, 2024. 4. 8.) 이러한 격차는 복지정책이나 이민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연령대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는 2015년 8.73점(20대 57.50점, 60대 이상 48.77점)에서 2021년 4.42점(20대 54.40점, 60대 이상 49.98점)으로 다소 축소되었다. 이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수용성이 소폭 상승한 것뿐 아니라 40대 이하 연령층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획득적 기준(예를 들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률

[표 2] 국민 정체성 기준별 중요성

(단위: %)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82.7	74.1	66.9	70.8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86.6	73.3	71.7	73.7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88.2	78.8	72.6	75.2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87.4	77.6	72.5	75.4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77.7	70.8	66.9	65.3
6.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 가는 것	90.6	83.1	80.8	80.2
7.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90.7	89.3	88.1	88.9
8.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90.7	90.0	91.7	87.7
9.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93.4	90.5	92.0	91.1
10. 한국 국적을 갖는 것	91.5	89.1	91.3	89.8
11.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91.5	83.2	88.1	85.7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198.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이 귀속적 기준(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국적이 여전히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는 제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성원권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도 점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귀속적 기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해당 기준들이 2018년에 비해 다시 뚜렷하게 상승한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

이민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한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조사 기간 동안 유럽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항목에 대해 유럽 전체의 찬성 비율은 61.1%였으며, 특히 그리스(86.3%)와 벨기에(80.1%)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찬성 비율은 2021년 기준 29.1%로, 조사 대상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의 찬성 비율은 41.5%로, 유럽 평균(42.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가 국가 재정

[표 3]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찬성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유럽 평균	61.1	42.4	56.1
프랑스	56.7	49.2	70.2
벨기에	80.1	65.1	79.1
네덜란드	56.6	35.2	44.5
독일(서)	72.5	53.1	66.3
이탈리아	58.5	33.1	41.9
룩셈부르크	50.1	31.9	44.2
덴마크	61.7	65.1	66.9
아일랜드	48.2	20.6	49.3
영국	59.4	38.6	65.6
북아일랜드	37.3	15.1	50.8
그리스	86.3	70.2	40.4
스페인	59.3	32.5	40.5
포르투갈	75.7	53.6	49.9
독일(동)	75.5	51.9	65.6
핀란드	37.2	26.8	60.9
스웨덴	56.1	24.2	57.0
오스트리아	67.0	54.5	61.3
한국(2012)	30.2	35.5	38.3
한국(2015)	30.1	46.7	48.6
한국(2018)	34.6	40.9	51.1
한국(2021)	29.1	41.5	43.4

주: 1) 유럽 국가의 찬성 응답률은 Eurobarometer 89(EU, 2018) 자료에 근거함.
2) 한국의 찬성 응답률은 다문화 수용성 조사 자료에 근거하며,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일자리 감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범죄율 상승),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질문을 포함함.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200.

답을 준다”는 질문에 대해 유럽 전체의 찬성 비율은 56.1%였는데, 이에 비해 한국은 43.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음의 맥락적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이민 역사와 높은 이민자(해외출생인구) 비율(EU 평균 약 14.1%)을 가진 반면(Frattini & Pulito, 2025)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이민 역사와 낮은

이민자 비율(약 5%)을 보인다(성도현, 2025. 3. 3.). 또한 이민자 인구의 구성 역시 한국은 주로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이라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Seol & Skrentny,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 사회에서 향후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4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김지범 외, 2024).⁵⁾ 분석에는 결측값을 제외한 총 1116명의 응답자가 포함되었다.

가.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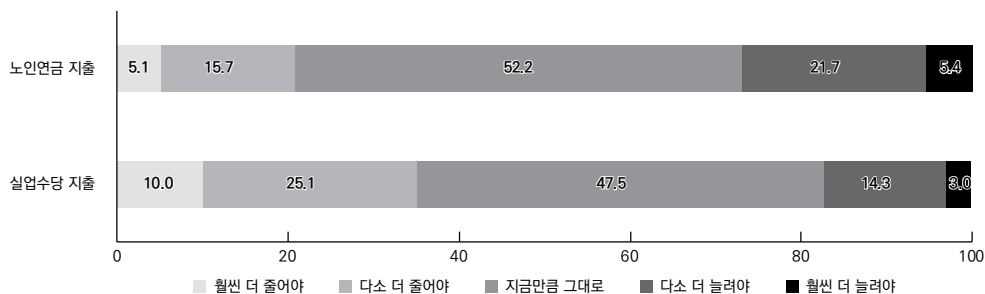
복지태도는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지출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⁶⁾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두 항목 모두에서 “지금만

큼 지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노인연금 52.2%, 실업수당 47.5%였다. 하지만 지출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은 노인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연금에 대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훨씬 더 늘려야’ 및 ‘다소 더 늘려야’)은 27.1%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20.8%)보다 높았다. 실업수당의 경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35.1%)이 늘려야 한다는 비율(17.3%)을 크게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민태도는 크게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민자 인구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이민자의 영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적

[그림 2] 복지태도: 노인연금 지출, 실업수당 지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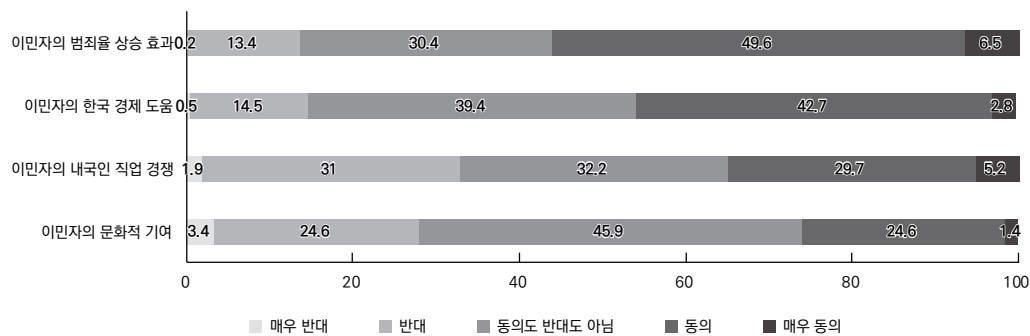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5)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조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 과학 영역 및 주제를 포괄한다. 2023년 조사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6)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다면 이는 세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① ‘훨씬 더 늘려야 한다’부터 ⑤ ‘훨씬 더 줄여야 한다’까지의 5점 척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 이민태도1: 이민자의 범죄율 상승, 한국 경제 도움, 내국인 직업 경쟁, 문화적 기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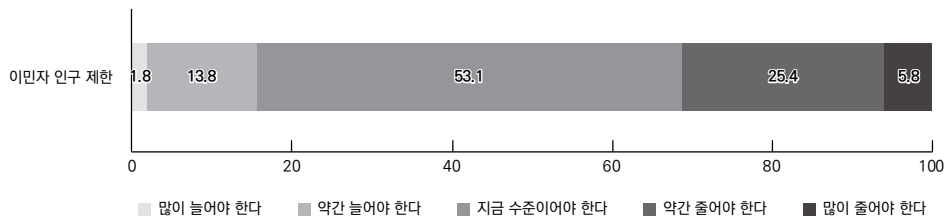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측면에서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매우 동의’ 및 ‘동의’) 비율은 26.0%, 반대(‘매우 반대’ 및 ‘반대’) 비율은 28.0%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 평가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 비율이

34.9%, 반대 비율이 32.9%로 집계되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는 반대 비율이 15.0%에 불과해 대체로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

[그림 4] 이민태도2: 이민자 인구 제한

(단위: %)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경제적·문화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일정 부분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이민자를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그림 4]에 따르면 “귀하는 오늘날 한국에 살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늘어야 한다’와 ‘약간 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15.6%)이 ‘많이 줄어야 한다’와 ‘약간 줄어야 한다’는 응답 비

율(31.2%)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반수인 53.1%는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민자 인구의 증가나 축소에 대해 아직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상관관계 분석

복지태도와 반이민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전반적으로 복지태도와 반

[표 4]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상관관계 분석

		복지태도1: 노인연금 지출	복지태도2: 실업수당 지출	이민태도1: 이민자의 범죄율 상승 효과	이민태도2: 이민자의 한국 경제 도움	이민태도3: 이민자의 내국인 직업 경쟁	이민태도4: 이민자의 문화적 기여	이민태도5: 이민자 수 억제
복지 태도1	Pearson 상관계수	1	.462**	-.085**	-.027	-.085**	.028	-.042
	유의확률 (양쪽)		.000	.004	.363	.005	.352	.166
복지 태도2	Pearson 상관계수	.462**	1	-.105**	-.028	-.037	.042	-.062*
	유의확률	.000		.000	.342	.215	.158	.040
이민 태도1	Pearson 상관계수	-.085**	-.105**	1	-.032	.271**	-.132**	.200**
	유의확률	.004	.000		.282	.000	.000	.000
이민 태도2	Pearson 상관계수	-.027	-.028	-.032	1	-.167**	.299**	-.248**
	유의확률	.363	.342	.282		.000	.000	.000
이민 태도3	Pearson 상관계수	-.085**	-.037	.271**	-.167**	1	-.117**	.231**
	유의확률	.005	.215	.000	.000		.000	.000
이민 태도4	Pearson 상관계수	.028	.042	-.132**	.299**	-.117**	1	-.195**
	유의확률	.352	.158	.000	.000	.000		.000
이민 태도5	Pearson 상관계수	-.042	-.062*	.200**	-.248**	.231**	-.195**	1
	유의확률	.166	.040	.000	.000	.000	.000	

주: ** p<.01(양쪽).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이민태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의 긍정적 영향(예: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나 문화적 공헌)은 복지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민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특히 '이민자에 의한 범죄율 상승'과 '이민자로 인한 내국인과의 직업 경쟁' 항목)은 복지태도(즉 '노인연금 지출'과 '실업수당 지출' 항목)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범죄율을 높이거나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또는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민자에 대한 인식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태도의 현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복지 제공이 시민의 권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원권의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종족적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복지 국수주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복지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특히 이민자의 고용 및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에 일

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자의 범죄율 상승이나 복지 혜택 남용과 같은 부정적 인식은 복지 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민자의 실질적 기여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보다 균형 있고, 근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 및 공공 담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둘째,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지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대 간 이민자 수용성의 차이는 정책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다. 특히 고령층의 낮은 수용성은 복지의 재분배 구조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이민자를 둘러싼 사회통합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이민자 통합 교육이나 지역 기반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와 이민정책의 통합적 설계를 통해 '복지는 내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복지 자격 기준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조세 기여 등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포용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의는 복지국가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성원'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불완전한 성원'에 대한 배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

결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의 실증분석이 단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점에서 두 변수, 즉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지태도와 이민태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예를 들어 정치 성향,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관계에 대한 정교한 연구 설계와 복지 국수주의적 태도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양하게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명세. (2020). 극우포퐁리즘이란 누가 지지하며 어떤 정당들인가? **2020 동아시아평화와 변명을 위한 구상**, pp. 164-184.
- 김경환. (2021). 한국의 이민자 권리 변화에 관한 연구: 이민자 권리의 조건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2), pp. 155-188.
- 김경환, 송형주. (2021). 한국의 난민정책: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편). **정책사례연구** (pp.105-120). 윤성사.
- 김규찬. (2020).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다문화 사회연구**, 13(2), pp. 27-63.
- 김동인, 문상현. (2024. 4. 8.) 인구 구성비 변화, 총선 판세를 바꾸다.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87&utm_source=chatgpt.com
- 김이선, 최윤정, 정연주, 장희영, 이명진, 양계민.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슬기, 김솔이. (2024).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서지윤. (2024. 9. 11.).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5년새 3배 증가... 김소희 “조건 강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9111006257258>
- 성도현. (2025. 3. 3.). [다문화 3.0] 한국 인구 100명 중 5명 외국인...역대 최대 경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12700371>
- 양세호, 이지안. (2023. 5. 10.). 인구소멸 향하는 韓, 활로는 이민뿐 국민 71% “이민근로자 기업에 도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733065?utm_source=chatgpt.com
- 임지훈. (2022. 4. 26.). 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UCNLJ55>
- Bolter, J. (2019). *Explainer: Who Is An Immigrant?*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content/explainer-who-immigrant>
- Brubaker, W. R. (1990). Im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nation-state in France and Germany: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ternational Sociology*, 5, pp. 379-407.
- Cea D’Ancona MÁ. (2016). Immigration as a threat: Explaining the changing pattern of xenophobia in Spai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7(2), pp. 569-

- 591.
- EU. (2018). Standard Eurobarometer 89. European Union.
- Frattini, T., & Pulito, G. (2025). *The immigration pop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Rockwool Foundation Berlin. <https://www.rfberlin.com/immigrant-population-eu/>
- Garand, J. C., Xu, P., & Davis, B. C. (2017). Immigration attitude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the American mass public.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pp. 146–162.
- Greve, B. (2019). *Welfare, populism and welfare chauvinism*. Policy Press.
- Kim, K. (2022). How does immigration affect welfare support in Kore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6(1), pp. 163–179.
- Kim, K., & Kang, S. W. (2025). Anti-immigration attitudes in a homogeneous society: the case of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pp. 1–22.
- Koning, E. A. (2019).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of Welfare Exclusion: Selective Solidarity in Western Democraci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arshall, T. H.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T. H. Marshall & T. Bottomore (eds).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 Pierson, C. (1998).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second edition). Polity Press.
- Reeskens, T., & Van Oorschot, W. (2012). Disentangling the 'New Liberal Dilemma': O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welfare redistribution preferences and welfare chauvi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3(2), pp. 120–139.
- Senik, C., Stichnoth, H., & Van der Straeten, K. (2009). Immigration and Native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Evidence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1(3), pp. 345–370.
- Seol, D. H., & Skrentny, J. D. (2009). Why Is There So Little Migrant Settlement in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3), 578–620.
- Slaven, M., Casella Colombeau, S., & Badenhoop, E. (2021). What drives the immigration–welfare policy link? Comparing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4(5), pp. 855–888.
- Tilly, C. (1995).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40, pp. 1–17.
- Van Oorschot, W. (2000). Who should get what, and why? On deservingness criteria and the conditionality of solidarity among the public. *Policy & Politics*, 28(1), pp. 33–48.

Anti-Immigration Attitud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State

Kim, Kyunghwa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anti-immigration attitudes in the context of Korea's welfare state. On a theoretical level, it explored how welfare provision functions as a citizenship right while being closely linked to the boundaries of social membership. On an empirical level, the analysis highlighted how the ethno-cultural notion of nationhood deeply embedded in Korean society can lead to negative perceptions and stereotypes toward those with different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in turn, may be associated with welfare chauvinistic attitudes.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upport for welfare and anti-immigration attitudes—particularly,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immigrants as threats to employment and public safety. In addition, generation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acceptance of immigrants, with older age groups showing relatively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receptiveness compared to younger cohort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future policies that address generational differences in immigrant acceptance, promote evidence-based public discourse and support the design of inclusive welfare systems.